한미 FTA 5차협상 무역구제 vs 의약품 공방

韓, 美에 "무역구제 내일까지 답변달라" 통첩

쇠고기 논의 개시…뼛조각은 별도 협의대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둘째날인 5일(현지시각) 양측은 서로의 약점인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무역구제의 경우 우리측이 가부 답변을 요구하는 통첩을 보내 시한인 6일이 5차 협상의 성패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무역구제, 의약품.의료기기, 자동차, 상품무역 분과 및 작업반 등 13개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야에 협상력을 모았다. 무역구제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상 늦어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의 변경 가능성을 확정, 미국 의회에 통고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번 협상이 성과를 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측은 그동안 4차례의 협상에 걸쳐 제기한 '제로잉' 규정 철폐 등 14개 요구사항 중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5가지 사항을 선별, 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워싱턴을 방문중"이라고 밝혀 무역구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펴온 미 의회와 의견조율이 진행중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 측은 커틀러 대표가 전날 '한국은 갈 길이 멀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의약품 분야에서 강공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외국 신약의 선별 등재과정에서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약품 허가를 둘러싼 신약과 제네릭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입장이며 제네릭 의약품의 허용 폭과 국내외 제약사간 차별요소 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 농산물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 농업분과는 식량작물에 이어 축산과 과일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쇠고기 등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FTA 농업분과 회의는 관세 문제만 협의하는 것이지 쇠고기 뼛조각 문제는 다른 채널을 통해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정시위단과 미국내 반 FTA 운동가 등 20여명은 이날도 협상장 밖에서 FTA 반대 시위를 벌였다. 양측은 협상 사흘째인 6일 노동 등 13개 분과회의를 진행하며 특히 상품무역,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환경, 자동차는 마지막 분과회의다. /연합뉴스

"시장개방 압력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등 여야의원 51명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장개방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산 냉장 쇠고기 또 뼛조각 검출

농림부는 지난 1일 수입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 10.2t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검출돼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수입 물량은 모두 반송 또는 폐기되고 미국 아이오아주 해당 작업장의 수입 승인 역시 취소된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X-레이 이물질 검출기 조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육안 검사 결과 갈비본살 3개 상자에서 7개의 뼛조각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뼛조각 크기는 가장 작은 것이 0.3㎝×0.6㎝, 가장 큰 것이 0.7㎝×1.0㎝ 정도였으나 모두 두께가 1㎜ 정도로 매우 얇아 X-레이 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검역원은 추정했다. /연합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 106인

반민규명위 명단 확정…청와대·국회 전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의 명단을 확정, 명단과 결정 이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반민규명위가 발표한 명단엔 권중현(權重顯)·박제순(朴齊純)·이근택(李根澤)·이완용(李完用) 등 이른바 '을사오적'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4명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1명인 이지용(李址鎔)은 이해관계인 통지절차가 진행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명단엔 이 밖에도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오제영(吳悌泳), '의병 탄압 경찰' 최진태(崔鎭泰), 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 백완혁(白完爀), 일진회 회장 이용구(李容九), 조선총독 직속 유림기관인 경학원 사성 등을 맡았던 이인직(李人稙),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던 선우일(鮮于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반민규명위가 제출한 보고서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19년 3.1 운동 발발까지인 '제1기(일제강점 초기)' 시기에 대해 정치·통치기구·경제사회·학술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총 1천400여쪽에 이르는 규모로, 2006년도 사업 및 조사활동에 관련된 내용(1권)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의 결정 이유서(2권)를 수록했다.

다만 반민족행위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중이거나 심의·의결 과정에 있는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내년도 조사보고서에 함께 실릴 예정이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자체 조사해 발표한 사례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확정·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민규명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 결과는 현재 활동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도 통보될 예정이며 재산 환수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 분담금 총액 7천255억원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6.6% 인상 합의…2년간 유효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6일 최종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올 5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후속 전화 협의 등을 거쳐 2007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협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기준으로 7천255억원으로 결정됐고 협정은 2007~2008년 2년간 유효하도록 했다. 내년 분담금은 올해 분담금에 비해 451억원(6.6%)이 늘어났지만 방위비 분담금 삭감 이전인 2004년의 7천469억원 보다는 214억원이 적은 수준이다.

2008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 물가 상승률과는 무관하게 분담금을 연간 3%씩 인상하도록 했던 인상률은 이번 합의문에서 삭제됐다.

협정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의 총 4개 기존 항목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액 전액이 계속해서 원화 기준으로 집행돼 분담금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이번 협상 결과는 한미 양국 모두가 전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나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심회' 5명 '간첩' 혐의 일괄기소

친북 비밀조직으로 지목된 '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8일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 등 5명을 '간첩' 혐의를 적용해 일괄기소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기소한 뒤에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장씨의 '대북 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국정원이 지난달 초 간첩죄를 의율해 송치한 장씨 등 5명에 대해 두 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해 한 달간 수사했으며,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8일 일괄기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몇 차례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하고 지령을 받아 일심회를 조직한 뒤 함께 구속된 손정목·최기영·이정훈·이진강씨를 차례로 포섭해 이들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도록 주선했으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건네받아 북한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